

광주시, 패밀리랜드 폐업 위기 호소에도 역대 임대료 챙겨

코로나 장기화에 사실상 휴장 상태...계약 해지 요청 거절 관련법 따라 80% 감면했다지만 1억9000만원 받아내 시민들엔 착한 임대료 독려 속 지가 상승 이유 6000만원 ↑

코로나19 여파로 호남지역 대표 놀이 휴식·공간인 광주 패밀리랜드가 개장 후 처음으로 폐업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등이 되풀이되면서 매달 수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난을 견디지 못한 업체는 사실상 건물주인 광주시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친 광주시는 "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임대료를 80%나 감액했다"며 생색까지 냈지만, 결국 폐업 직전인 업체를 상대로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역대의 임대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광주패밀리랜드 수탁 업체가 2016년 맺은 광주 패밀리랜드 관리 위탁 계약 기간이 오는 6월 종료된다. 이후 계약 연장 여부는 업체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입장에선 당장 이번 달을 넘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재계약 연장이 힘든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광주시에 연간 위탁료(임대료) 6억 2000만원을 내고 패밀리랜드를 운영중인 업체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00일 정도 휴장하는 등 막대

한 피해를 입고 있다. 나머지 개장 기간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3분의 1만 입장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심리적인 거부감으로 방문객이 거의 없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업체측은 매일 2억 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해 7월 광주시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당시 업체측은 광주시 산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우치근린공원 내 유원시설 관리위탁' 계약해지 의사 통보서를 보내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더 이상 누적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계약 해지를 사전 통보한다"며 "특히 당사의 폐업으로 직원과 패밀리랜드 내 임대상가 등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새로운 수탁자를 신속하게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실제 패밀리랜드에는 직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체측과 계약을 맺고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 등을 하는 재입대 업소도 수십 곳에 이른다. 패밀리

랜드가 문을 닫으면 100명이 넘는 주민이 모두 일 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공유재산법상 코로나19 피해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며, 재난 등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광주시는 또 "관련법에 따라 1년 위탁료 6억 2000만원 중 80%인 4억 9600만원을 감감했다"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업체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직전인 상황에서 감면을 받긴 했지만 결국 광주시에 2억원에 육박하는 임대료를 낸 것이다. 광주시는 한술 더 떠 지난해 7월 기존 관리 위탁료마저도 관련법을 들어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6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단순한 임대료 감면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데, 건

물주적인 광주시가 임대계약 해지마저 거부하고, 임대료를 추가로 올린 것은 공공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며 "서울 등 타지역은 공공시설 임대업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은 물론 인건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견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광주시)에 얘기하면 우리와는 계약조건 등이 다르다는 말만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패밀리랜드 관리위탁 차질없이 진행'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위탁료 감면 지원과 업체측의 자구노력 등에 힘입어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신규 수탁자를 모집하겠다"면서 "올 상반기에도 위탁료를 추가 감면하겠으며, 빠르면 2월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하반기부터는 경영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체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내용을 내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북구 SOC사업 3곳 착공식 22일 광주 북구문화센터 개관식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3곳(신용 복합공공도서관, 중흥 복합공공도서관,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의 착공식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화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문인 북구청장과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사·구의원 등 각 기관 대표들이 카드섹션을 펼쳐 보이고 있다.

광주 지자체 격무·기피 업무 공무원 수당 지급 추진

중요직무급 선발, 월 10만원 예정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격무·기피 업무자나 중요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24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시와 서구·북구·광산구 등은 오는 3월부터 직무의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6급 이하 직원을 일부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운영안을 마련 중이다. 동구와 남구는 현재까지 검토중이다.

중요직무급 수당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신설됐다.

중점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 격무·기피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10만원 이하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

자치단체들은 격무부서와 지급 대상 선정 등 공정한 선정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중요직무급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거나 직원 배심위원단의 평가까지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관적인 중점업무 선정에 앞서 기피·격무 업무자나 핵심 현안 담당자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수 직원이 공감하는 중요직무 선정 기준 마련과 절차 진행이 핵심적 요소"라면서 "객관적 기준 마련과 직원 의견 수렴에 힘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현안 적극 지원

김영록 지사, 전해철 장관 약속 받아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소멸 위기, 고향 사랑 기부금, 지방재정분권 개선 등 전남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24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건의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정부 서훈청사서서 전해철 장관을 만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한국 섬진흥원 전

남 설립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등 6건의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김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중으로 입법공정회까지 진행됐으나 단 한 차례도 심사를 받지 못했다"며 "유가족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국가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급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 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섬 관련 기관이 집중돼 있어

섬 발전 정책과 사업 수행의 최적지"라며 "그동안 한국 섬진흥원의 설립과 유지에 노력해 온 점을 감안, 반드시 전남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 등으로 대도시와 지방의 사회·경제적 기반 불균형과 함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부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1인당 최대 31만원

전남도가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해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가구의 만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사·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말 기준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당초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결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인문	신학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학부	8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2(화) ~ 25(월)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6
		성경연구학과(Th.M.)	2
		신학과(Ph.D.)	3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3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3
		신학과(Th.M.)	4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3
		상담심리치료학과(M.A.)	8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6
		재활심리치료학과(M.A.)	5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8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17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30분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3시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